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7. 7. (화)

총 5페이지

**6월 15일부터 이어진 16차 릴레이 성명,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성명발표를 끝으로 대장정 마무리**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릴레이
성명발표
담당

센터명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총 5장

담당자

한다숨 팀장

연락처

02-6348-1318

성 명 서

**전국 어디에 있던 모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질 높은 최상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고도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성착취(성매매)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당장 마련하라.

**1. 전국 어디에 있던 모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질 높은 최상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전국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릴레이 성명

을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무 이행을 촉구하였다. 전국 지원센터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 지원은 피해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아동·청소년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누구나 안정적인 지원 체계 내에서 동등하고 수준 높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3인의 상담원을 5인으로 증원해 달라는 것과, 엄연히 법률적 근거가 있는 시설을 3년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지원과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 ‘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성착취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는 최소 징역형 이상이 규정된 중범죄임에도, 정작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가의 보호 책임에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행법은 전국 각 지원센터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성착취 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교육·상담 및 지원, ▲병원 및 지원 시설 연계와 일시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사회 복귀 지원, ▲법정대리인 대상 교육·상담,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원을 하도록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방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성평등가족부가 각 지원센터에 배치한 인력은 단 3명뿐이다. 현재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 총 6명의 상담원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는 지역적·인구적 특성과 디지털 기술 매개 성착취 범죄의 특징인 복합 피해(온라인 그루밍, 사진·영상 제작, 유포, 협박, 개인정보 기반의 성폭력, 성매매 등이 일부 또는 모두가 포함됨)로 인해 숨 쉴 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서울센터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경우 18~22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상담원 3명이 모두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 지원과 일상 회복은 단순 상담과 숙식 제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친 법률·의료·심리 등 통합 지원과 안정적인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성평등가족부는 전국에 각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정작 단 3명의 상담원에게 이러한 통합적·지속적 지원을 떠맡기고 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 건수만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약 353% 증가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는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약 274% 급증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는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은 여전히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인력 충원과 예산 증액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었지만, 번번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 원칙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묻고 싶다. 이것은 성평등가족부의 무능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 부처에 욕망이 있어 기획재정부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가위질을 하며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수많은 끔찍한 피해가 이어지며 어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국가에게 도대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인가?

결국 정부는 현행법상 규정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조직 체계와 인력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담원들의 탈출이 줄을 잇고 있다.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되었고, 한 사람만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독박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장의 상담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현장 상담원들의 소진으로 인해 전문 인력이 양성될 수도 없음은 물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회복의 기회를 잃거나 재피해 위험에 놓이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성착취 피해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아동·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서울센터는 모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 발생 지역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감과 연대

의 마음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2. 눈가림식 플랫폼 규제가 낳은 역효과를 규탄하며, 실효성 있는 디지털 플랫폼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서울센터는 지난 2026년 6월 15일 자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가 플레이스토어 내 ‘청소년 이용 불가(19금)’로 등급이 상향된 조치를 적극 환영하였으며, 이 조치가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새로이 양산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등급 상향 조치의 허점은 너무나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X 가입 시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출생연도를 19세 이상의 성인인 것처럼 임의로 설정하기만 하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X 가입과 이용이 가능했다. 특히 기존에는 이용자의 나이를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할 경우, 성인 콘텐츠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라벨 지정을 통해 열람을 제한하기라도 하였지만, 등급 상향 조치를 하면서 성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전제로 이 필터링 기능마저 사라져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유해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플랫폼의 미흡한 보호조치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X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입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왜 가입 시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입력하여 성착취 피해를 입었나’는 식의 질책과 ‘성인인 줄 알았다’는 성착취 가해자들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이 성착취의 거대한 온상이 되어 아동·청소년들을 집어삼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거론하며 ‘AI 특화 시범도시’, ‘AI 국가 인프라 구축’ 등 화려한 디지털 미래 혁신의 청사진만을 늘어놓고 있다. 우리는 국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눈앞에서 첨단 기술에 매개되어 영혼이 파괴되고 죽어가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온라인 안전 시스템에는 단 한 톨의 예산과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국가가 말하는 미래형 디지털 선진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현재의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성착취 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

가의 침단화 정책은 속 빈 강정이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정부는 성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더 이상 플랫폼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플랫폼마다의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며 디지털 환경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원센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대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안전과 회복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이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누구나 어디에서든 안정적이고 동등한 최상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의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들은 국가에 사업증을 전면 반납하는 중대한 결단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끝>

2026. 7. 7.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